

## 군공항 이전 출구 찾나? 범정부협의체 구성한다

광주시, 이전 난항 “유감” 표명  
 전남도, 유감 표명 수용 방침  
 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기대

수 년째 교착 상태인 광주 군(軍)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과 참여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해 공항 논의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합의한 공항 해법이 이견 차로 벽에 부딪히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까지 포함한 4자 협의도 진척이 없자, 근본적 해결책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고 막대한 재원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이 ‘정부 주도론’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시·도는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 대안 마련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범정부 협의체 출범을 여러 차례 건의해 왔다.

광주시는 이날 김기강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그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는 등 광

주·전남 상생과 동반 성장 차원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최대 현안인 공항 이전 문제에 관한 논의가 새해 들어서도 진전되지 않고, (시·도) 합의 사항이 이행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시의 일방적인 민간공항 이전 약속 파기에 사과를 요구해왔던 전남도는 광주시의 유감 표명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 구성되면 적극 참여하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논의도 정상화 할 방침이다.

한편 시·도는 2018년 민선7기 첫 상생발전위를 열어 광주·전남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국고 확보에 공동 노력하고, 군 공항은 이전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조기에 이전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년여 동안 시와 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조차 선정하지 못했고, 의회와 시민단체의 입장도 두 갈래로 갈렸다.

이후 군공항 이전 4자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이 역시 이전이 맞물리면서 민간공항 이전은 보류되고 군공항 이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는 등 시·도간 합의사항은 3년이 다되도록 진척이 없는 상태다. 기동취재본부



만개한 벚꽃 연이은 따뜻한 날씨에 벚꽃이 만개하면서 주말이었던 지난 28일 광양 서천변에 벚꽃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대검 “땅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법정최고형 구형”

전국 검찰청에 ‘총력 대응 방안’ 지시  
 부장 1명·평검사 3~4명 전담수사팀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정부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전담수사팀은 전국에서 총 50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검은 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할 예정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은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부패 범죄이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대검은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혐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 및 처벌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다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직자와 그 가족 및 지인 등이 관련돼 있는 사건에 중점을 두되,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검토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중심으로 검

찰의 수사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혐보를 수집하고, 사안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원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 만큼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투기 범행 근절을 위한 검찰의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응해왔으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31일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 및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들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 ‘코로나 쇼크 어디까지...’ 1분기 호남 취업자 감소폭 확대

코로나19의 여파로 읍주리든 호남지역 고용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의 ‘2021년 1분기중 호남권 경제 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1~2월 중 월평균 취업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4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1만2000명이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됐다.

1~2월 중 호남지역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 동기대비 1.0% 올라 지난해 4분기(0.4%)

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품물가는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가정식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축산물의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1~2월 중 호남지역 주택매매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0.2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남, 전북이 모두 2019년 이후 월중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2020년 12월 이후 상승폭이 축소됐다. 김민정기자

#방콕탈출 #힐링타임  
 #안전한영화관람

# 함평 자동차극장

## - GRAND OPEN -

1관 19:20~ 21:45~  
 2관 19:00~ 21:30~

### 코로나19 걱정없이 매일저녁2회상영

※ 매주 월요일 휴관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함평군 HAMPYEONG COUNTY

예매 [www.hpcc.co.kr](http://www.hpcc.co.kr) 문의 061)320-2225